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 1. 26.



법 제 처

순서

I . 추진성과와 평가	1
--------------------	---

II .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3
--------------------------------	---

III . 핵심 추진과제	5
---------------------	---

1.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5
-----------------------------	---

2.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8
---------------------------	---

3.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	13
-----------------------------------	----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입법전략체계 구축

- (100일 입법대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 출범 100일 내 우선적으로 신속 추진할 입법과제 선정, 추진대책 수립(5.26.)
 - * 법률 47건 국회제출 완료, 하위법령 32건 개정완료
- (국정과제 입법계획) 체계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711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5년간의 법령별 추진계획을 종합한 입법계획 수립(8.30.) 및 추진
 - * 국정과제 이행입법(711건) : 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
 - * 법률 56건 국회통과, 하위법령 115건 개정완료('23.1.18. 기준)

□ 법제처 소관 국정과제 추진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12.27. 공포)하여 정부 출범 첫 해에 국정과제 조기 이행
국정 13-5
 - * 발의 9개월만에 국회통과 완료(5.17.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12.8. 국회 통과)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제재처분의 범위와 정도를 완화하는 법령정비 국정 1-3
 - * △제재처분의 구체적 감경사유에 소상공인 추가,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등
 - * 137건의 정비과제 확정('22.10.11. 국무회의 보고), 45건 연내 우선정비 완료
- (청년 경제활동 촉진)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 국정 92-3
 - (늦깎이 학생 취업 지원) 취업 및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에 학위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하도록 개선
 - *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60개 법령 개정완료
 - (미성년자 취업준비 지원) 성년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영업에 필요한 자격시험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 공인노무사법 등 17개 정비과제 발굴

-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 체계 마련을 지원하여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국정 111-2
- (자치권 제한 법령 정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발굴하여 일괄정비
 - *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 16개 하위법령 개정완료
- (선제적 입법모델 지원)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신속한 조례 정비를 위해 선제적 입법모델(41건) 마련·제공

□ 현안 대응을 위한 법제지원

- (정부 운영의 기틀 확립 지원)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
 - 적법성 등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 대외소통 활동(국회 대응,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등) 실시
- (정부조직 혁신 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 혁신 지원
 - (위원회 정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정비기준 마련 및 적극적 사전심사로 위원회 정비를 지원
 - * 법률안 220건의 국회제출(9.30.) 및 시행령안 27건 정비완료(10.4.) 지원
 - (정부조직법 개정)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적 쟁점 검토 지원

2 개선 필요사항

- (법안처리 대책 마련 필요)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81.1%(90/111)가 국회계류 중이고,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율도 20.4%(56/274)에 불과
 -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법안처리 대책 마련 필요
- (입법 총괄·관리 필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 추세 지속
 -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지원을 위한 입법 총괄·관리 기능 강화 필요

Ⅱ. 2023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입법환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나, 입법환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
 -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 실적이 높지 않아 국민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
 -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24년 상반기에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 적극적 입법추진을 통해 연내 최대한의 입법성과 창출 필요
 - * 22대 총선('24. 4월), 제22대 국회 원구성('24. 6월) 등
 - 의원발의 법안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대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국회심의를 지원할 필요
- (경제여건)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
 -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필요
 -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점증하는 상황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법제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필요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문자 정보보다 시각 정보에 친숙한 청년 세대 등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그림·도표 등의 시각 정보를 활용한 법령정보 제공 확대 필요
 - 시대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필요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신속 추진 및 의원입법 검토·지원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법제 혁신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법령정보 제공
 -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교류 협력 강화

Ⅲ. 핵심 추진과제

1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① 국정과제 입법 신속 추진 및 의원입법 검토·지원 강화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추진

- (추진현황) 국회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218건의 국회통과 필요, '23년 내 법률 165건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79건 제·개정 필요

< 국정과제 입법 현황 >

법률	제출완료		제출 예정		
	통과	계류	'23상	'23하	'24~
488	56	218	78	87	49

하위법령	정비완료	정비 예정		
		'23상	'23하	'24~
223	115	44	35	29

- (계류 법안 신속처리 지원) 국회심의 지연사유 분석, 유형별 처리전략 마련
 - 부처이건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이견조정 후 처리
 - 법적 쟁점 관련 대안마련으로 국회 심의를 지원하는 등 유형별 처리전략*에 따른 부처 적극 대응 독려 및 입법추진 노력 주기적 점검·평가(국조실 협업)
- * △여야이견: 당정협의 등 추진, △이해관계자 반대: 정책설명회, 쟁점별 분리추진 등
- (제출예정 법안 조기 제출) '23년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은 '23년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 제출 추진
 - 사전심사, 법안 조문화 지원 등을 통해 입법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지원 등을 통해 국회 조기제출 지원
- * 원스톱 법제지원 :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입법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 (하위법령 적극 정비) 하위법령은 상반기 내 조기 개정완료 노력
 -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등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정과제 달성이 가능한 과제의 추가 발굴 및 신속 정비 추진

□ 의원입법에 대한 검토 및 지원 강화

- (의원입법 지원 시스템 고도화) 입법추진 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상시 입법플랫폼 운영을 통해 정부 내 의원입법 지원 역량 제고
 - 국회 입법상황의 모니터링*으로 법안별 쟁점을 사전에 포착·점검하고, 적극적·선제적 법제지원 실시

* 모니터링 체계: ① 모니터링, ② 법안의 유형별 분류·관리,
③ 법안 진행상황 분석·점검 ④ 법리적 검토의견 제시

- 주요 법안, 쟁점법안의 발의·심의진행 상황 공유 등을 위한 부처간 상시협력 네트워크 구축·유지
- (주요법안 통과 지원) 국정과제법안, 민생법안 등 주요 의원발의 법안은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심의 단계별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 부처간 이견 조정, 범부처 협업 및 야당과의 소통으로 법안의 신속 통과 추진
- (쟁점법안 대응 지원) 예산상 또는 집행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
 - 법안의 쟁점 사항 사전 파악, 신속한 법리 검토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정부 내 통일된 입장(One-Voice) 정리·공유
 - 관계 부처간 소통·협업,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안대응 법제지원 강화

- 부처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적법성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책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 협조체계 구축
 - 법리적 검토의견 제공 및 국회·언론 공동대응 등 정부 원팀 기조 강화

2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2022. 12. 15. 국정과제 점검회의



“법을 만들 때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다양한 행정법규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자율적으로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본적으로 없지 않나.....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 지방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구축

- (조례 위임 확대)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거나,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사례 수도법 제55조

기존 법령에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확일적으로 규정**



개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질기준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국가 관여 최소화)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소관 사무에 대한 중앙부처 사전 승인·협의(동의) 및 보고 의무 최소화

사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기존 시·도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개선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자율적 집행 및 적극적인 재해 극복 지원

- (자치입법권 제한 금지)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 사전차단

사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기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 지정기준 제한



개선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공설장례식장 등의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지방 상시 법령정비 협력체계 운영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치법규 입법모델 제공

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법제 혁신

□ 일상 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 ('만 나이' 정착)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대국민홍보 실시, 범부처 협업을 통한 대상별(학생·지역주민 등) '만 나이' 사용 점검 및 지원
- ('연 나이' 정비) '연 나이' 규정 법령은 국민의견조사·부처협의를 거쳐 정비 추진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 마련,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면책 근거 마련 등

<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검토 예시 >

사 례		입법취지	검 토
농약관리법	농약 판매 금지	위험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개인별 규제 (‘만 나이’ 기준)로도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
	‘연 나이’ 19세 미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구매 제한	사행행위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만 나이’ 기준으로 법령정비 추진
	‘연 나이’ 19세 미만		

□ 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영향분석 확대

- (제도개선 점검) '22년 실시한 입법영향분석(①공공재정환수법, ②도로교통법)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점검

* 입법영향분석 :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집행실태와 효과성, 영향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법제 개선에 활용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 제도개선 필요 과제

공공재정환수법

▶ 환수 이자와 가산금 중복 징수 문제 개선

- 부정이의 환수 시 이자를 부과한 후 이자 체납에 대해 다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징수 소지가 있으므로 이자와 가산금의 관계 보완 권고

도로교통법

▶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 명확화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명확화 필요(지정 표시와 해제 표시 설치기준 개선 등)

- (입법영향분석 확대) '23년에는 장애인 판정방식 변경 등 3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영향분석 제도 확대 추진**

* ① 장애인 판정방식 변경 및 장애인 지원 제도(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② 어린이 안전 제도(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위생용품 관리 제도(위생용품 관리법)

**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령 및 입법영향분석 방식(위탁 → 위탁 + 법제처 직접 수행) 다양화

□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제 혁신

- (권리구제 제도 정착) 새로 시행('23.3.24.)되는 행정기본법 상 국민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현장 혼선 방지 및 제도 정착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경과 후 해당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 신청 허용

- (국민 권익 보호 확대) 국민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영업자 지위승계,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

공통기준에 따른 국민 권익 보호 확대 예시
▶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해 발생 예방 ▶ (제재처분 승계) 승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존재 및 그 승계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영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승계인의 권익 보호

□ 개별법의 공통제도 정비

-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맞추으로써 행정법 체계 간소화 및 일관된 법 적용기준·체계 마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2단계 정비사업>

1단계 (2022년 법률안 발의)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인허가의제 ③ 과징금 ④ 이의신청
2단계 (2023년 입법 추진)	① 결격사유 ② 제재처분의 기준 ③ 이행강제금 ④ 직접강제 ⑤ 즉시강제 ⑥ 수수료

- '22년 발의된 4개 공통제도 관련 200여개 법률안(일괄 개정법률안 19개, 개별 개정법률안 4건)의 국회심의 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 처리 지원
- '23년에는 6개 공통제도에 대한 개별법 정비안 마련 및 연내 입법 추진

②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정 1-3

- (영업규제 완화) 획일적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장벽 제거 및 영업활동 적극 지원

- 획일적 인·허가를 업종·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탄력적 규제 적용 관련 예시

▶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 면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원칙)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함
(예외) 거래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 면제

-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창업·업종전환을 위해 사전 교육이수 의무 완화

소상공인 교육의무 완화 관련 예시

▶ 식품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이수 시기 완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칙) 식품제조·판매업 개시 전 식품위생교육 이수
(예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영업 시작 후 식품위생교육 이수 허용

- (행정제재 처분 완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제재 처분 대폭 완화

* △등록취소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 확대 등 연내추진(92건)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행정제재 처분 면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부여 관련 예시

▶ 측량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측량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법령 위반 시 소상공인 면책규정 신설

소상공인 대상 면책규정 신설 관련 예시

▶ 청소년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 위반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

- (취업 취약계층 지원) 취업 또는 자격취득 요건을 정비하여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 **국정 92-3** 및 재취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지원

- 인력요건의 일률적 학력기준을 영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차등화

일률적 학력기준 완화 관련 예시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자격기준을 학력·경력별로 다양하게 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학력·경력 기준을

대학 등의 임업·원예·조경분야 졸업 +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임업·조경분야 졸업 + 2년 이상 경력자로 차등화

- 각종 자격·영업별 연령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

연령제한 규정 합리화 관련 예시

▶ 사격장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기준 중 연령제한 요건을 완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연령제한 요건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완화

-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강화

- 개별법의 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 확대 관련 예시

▶ 보육 지원 우선 제공 대상 아동 범위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배우자와 사별·이혼 등을 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정(같은 법 제5조의2)도 포함

- 점자·음성안내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 제고

장애인 편의 제고 관련 예시

▶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음성안내 제공

(「약사법」, 보건복지부)

-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등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 (신기술 규제특례 법제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유효성·안정성이 담보된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법제화 지원(국조실 협업)

* '22.12.26. 기준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등 승인, '19.2.11. 실증특례 1호 2년 승인 이후 2년 연장으로 '23년부터 만기 도래

- 실증특례·임시허가에 따른 법제화 추진과제 적극 발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신속 법제화 추진

규제샌드박스 법제화('22. 9월) 사례

- ▶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제공(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샌드박스)** 스마트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 서비스 사업 승인('20.10.19.)
 - **(주요내용)** 주차장에서 스마트 주차로봇이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여 자동차를 이송함으로써 주차장 내 안전사고 감소 및 주차장 공간 효율화

- (과학적 규제법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정비시스템 구축(행안부 협업)



- (숨은 규제 발굴·정비) 자치법규·행정규칙 속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 또는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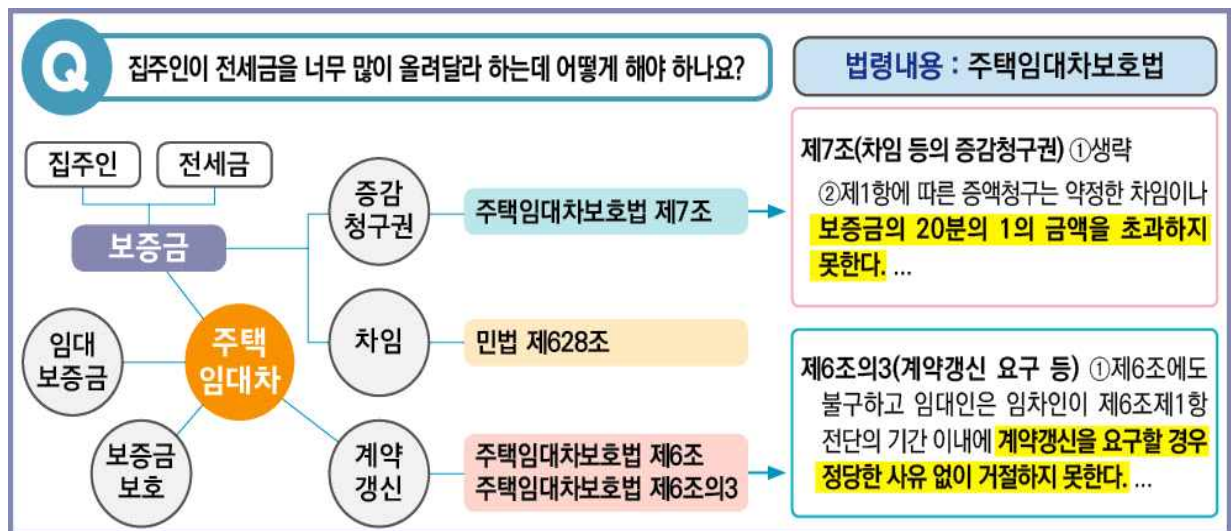
자치법규 속 규제 사전 방지 사례

- ▶ ○○군 건축물관리 조례안('22.8월)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건축물'에 대한 해체신고 대상을 위임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해서까지 해체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도록 하여, **위법한 규제 사전 방지**

1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일상용어나 질문에서 의도를 분석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의 기초가 되는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연내 구축 완료

* 법령정보지식베이스 : 법령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검색에 필요한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22년 법률 약 1,600건 구축 완료, '23년 하위법령 약 3,800건 구축 예정

-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무료로 개방하여 민간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등 IT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신산업 창출 지원

□ 한 곳에서 찾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구축

- 법령, 판례, 자치법규 등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융위, 방통위 등의 법령관련 결정문*까지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의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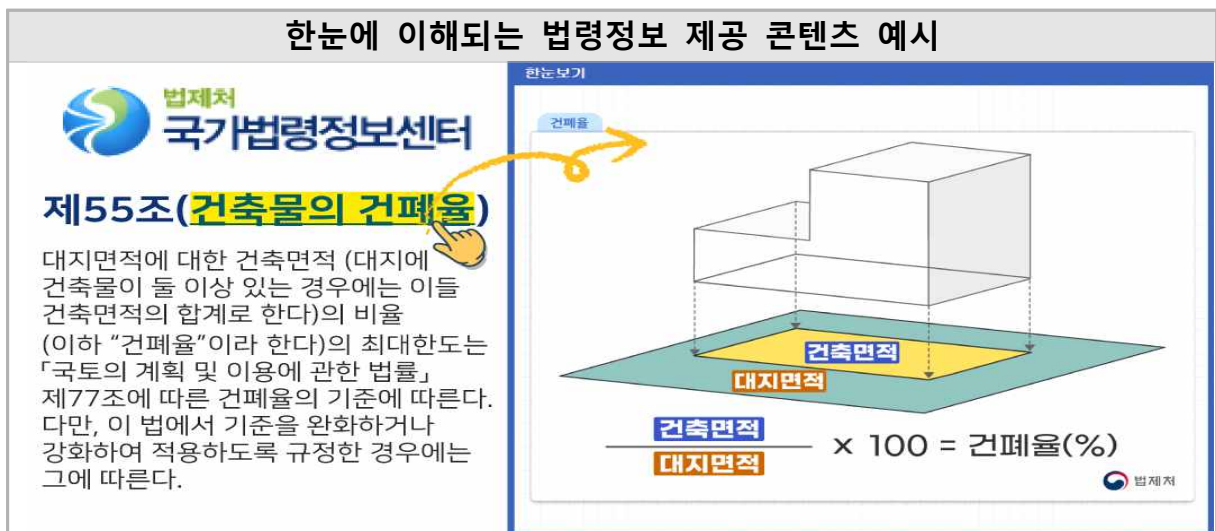
* (금융위) 보험 관련 위반사항 시정조치,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 시정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로 민간에 개방·공유하여 정보 접근성 및 민간의 활용 편의성 제고

②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법령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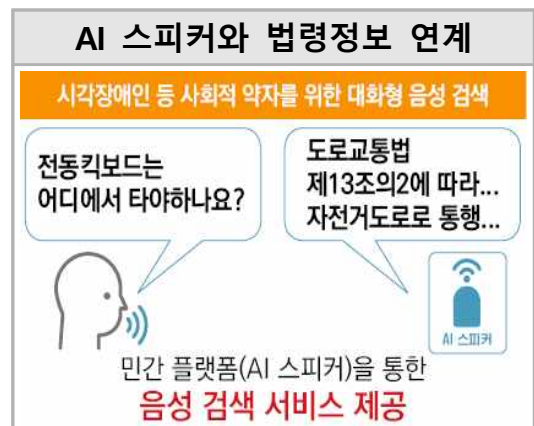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확대

- 법령정보 시각콘텐츠 제공사업의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22.2월, 11월)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 * '해당 서비스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88%), '서비스법령 확대가 필요하다(91%)'
 -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30개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콘텐츠를 추가 개발·제공
 - * 콘텐츠 제공 수요가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계약갱신 요구), 지방세 관련 법령(과세표준·세율) 등
 -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의견을 상시 반영하여 콘텐츠 개선



□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법령해설 정보인 생활법령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제공
 - * 금융·임대차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금리인하요구권, 유류세, 공공임대주택, 빈집 처분 등)
- 민간 AI스피커와 법령정보를 연계하는 등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
 - 모바일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모바일 앱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신구법 비교서비스 확대)하는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교류 협력 강화

□ 대한민국 법제 공유 확대

-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와 법령정보 인프라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친(親)한국적 법제 환경 구축

* 법제 70년의 주요 사항을 “법제 70년사”로 정리·발간 추진

대한민국 법제 공유 사례

- ▶ 아시아 국가의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부패방지법, 인도네시아에 지방자치법, 베트남에 정보공개법 등을 제공

-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와 IT 기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법제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KOICA ODA) 사업으로 추진

- 아시아 국가와 법제 현안 공동대응 등 상생·공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추진

* (대상)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운영) 법제사례 공유, 법제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및 관련 회의 개최

□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 무역이 활발한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의 무역·투자 법령 등 15,000여건 제공

- 수출 중소기업, 현지 진출기업 대상 수요 조사(연 2회)를 통해 해외 법령정보 수요 집중 발굴, 법령정보 및 법제동향 자료의 선제적 제공

*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5일 이내) 수집·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상시 제공

- K-콘텐츠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 세계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업 중점 지원(문체부 협업)